

러시아 대선 이후 푸틴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이재영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위원 (lly@kiep.go.kr, Tel: 3460-1089)

민지영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원 (jymin@kiep.go.kr, Tel: 3460-1095)

강부균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원 (bgkang@kiep.go.kr, Tel: 3460-1242)

차 례 ● ● ●

1. 2012년 러시아 대선 결과
2. 푸틴 3기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2012년 3월 4일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당선되어 2000~08년 대통령 연임에 이어 3기 집권에 성공함.
 - 푸틴 총리는 총 유권자의 63.37%가 참가한 1차 투표 잠정 개표결과 약 4,560만 표를 얻어 63.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음.
 - 2008년 12월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 바 있어, 6년 뒤 재선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24년까지 집권할 가능성도 있음.
- ▶ 푸틴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푸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 투자환경 개선 △ R&D 강화 및 혁신 △ 민영화 △ 세제개편 △ 지역경제 개발로 요약됨.
 - 러시아 경제의 현대화를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비원자재 부문·사회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며, R&D 강화 및 혁신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정부 자금지원 확대는 물론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경쟁력 제고 및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2016년까지 정부 부문을 축소하는 민영화 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 재정 확충 및 사회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사치세 도입 등을 통해 세수증대를 추진하고, 산업다각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혜택 제공, WTO 가입 등에 따른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를 확립할 방침임.
 -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대도시간 고속철도 건설 등 운송 현대화와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실행을 추진할 계획임.
- ▶ 오는 5월 7일 출범할 푸틴 3기에는 투자환경 개선 및 경제 현대화를 위해 각종 제도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투명성 및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기업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그리고 민영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한국은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을 포함한 메가 프로젝트를 러시아와 공동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1. 2012년 러시아 대선 결과

- 2012년 3월 4일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총리가 당선되어 2000~08년 대통령 연임에 이어 3기 집권에 성공함.
 - 푸틴은 “대통령은 ‘연속 3기’ 이상 재임하지 못한다”라는 러시아헌법 제81조에 따라 잠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가 2011년 9월 통합러시아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음.
 - 2008년 12월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 바 있어, 6년 뒤 재선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24년까지 집권할 가능성도 있음.
- 5명이 입후보한 이번 선거의 잠정 개표결과,¹⁾ 푸틴 총리는 총 유권자의 63.37%가 참가한 1차 투표에서 약 4,560만 표를 얻어 득표율 63.6%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
 - [표 1]에서 보듯이, 겐나디 주가노프(공산당)는 17.18%, 미하일 프로호로프(무소속)는 7.98%, 그리고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자유민주당)와 세르게이 미로노프(정의러시아당)는 각각 6.22%, 3.85%의 득표율을 기록함.
 - 무소속의 젊은 신흥재벌인 미하일 프로호로프(47세)가 일약 3위에 오른 데는 지난 20년 동안 줄곧 출마한 주가노프나 지리노프스키에 비해 참신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음.

표 1. 2012년 러시아 대선 잠정 개표결과

후보	정당	득표수	득표율(%)
블라디미르 푸틴	통합러시아당	45,602,075	63.60
겐나디 주가노프	공산당	12,318,353	17.18
미하일 프로호로프	무소속	5,722,508	7.98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	자유민주당	4,458,103	6.22
세르게이 미로노프	정의러시아당	2,763,935	3.85

자료: Rianovosti, 러시아 중앙선거위.

표 2. 2000년 이후 러시아 대선 득표율

선거일	2000년 3월	2004년 3월	2008년 3월	2012년 3월
당선자	푸틴	푸틴	메드베데프	푸틴
정당	무소속	무소속 (통합러시아당 지원)	무소속 (통합러시아당 지원)	통합러시아당
득표율(%)	52.94	71.31	71.20	63.60(잠정)

자료: Vesti, 러시아 중앙선거위.

1) 러시아 중앙선거위는 2012년 3월 14일경 최종 선거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Rianovosti(2012. 3. 5).

- 2011년 12월 4일 총선에서 통합러시아당이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고(49.3% 득표), 총선 부정에 항의하는 반정부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선거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푸틴의 득표율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임.
 - 그러나 [표 2]에서 보듯이 과거 2004년 대선과 2008년 메드베데프 대선 당시 71%를 상회한 득표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과거에 비해 인기가 하락한 푸틴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당의 리더보다는 국가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여당과 비정부단체의 연합체인 'All Russia People's Front'를 내세워 통합러시아당과 거리두기 전략을 펼쳤음.
- 2011년 12월 이후 점진적인 지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2차 투표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푸틴 총리는 압도적인 표차로 3선에 성공해 오는 5월 7일 대통령 취임식을 치를 예정임.

2. 푸틴 3기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 푸틴은 총리 직무수행을 이유로 대선후보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총 일곱 차례에 걸쳐 러시아 유력 언론에 향후 정책방향을 담은 기고문을 발표하였는데,²⁾ 2012년 1월 30일 발표한 "On our Economic Tasks" 및 각종 정부·민간회의, 언론 보도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푸틴 3기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 투자환경 개선 △ R&D 강화 및 혁신 △ 민영화 △ 세제개편 △ 지역경제 개발로 요약됨.

가. 투자환경 개선

- 러시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위기를 무사히 극복하였으나 여전히 자원의존적 경제구조가 경제발전의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글로벌 위기로 인해 러시아는 2009년 -7.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으나 2011년 4.2%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IMF의 Odd Per Brekk은 러시아 경제가 다각화되지 않는다면 브레즈네프 시대와 같은 정체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함.

2) 1. *Russia Muscles up-The Challenges We Must Rise to Face*, 「Izvestiya」 (2012. 1. 16) 러시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언급.
 2. *The Ethnicity Issue*, 「Nezavisimaya Gazeta」 (2012. 1. 23) 다인종 국가 문제 언급.
 3. *Economic Tasks*, 「Vedomosti」 (2012. 1. 30) 경제정책 방향 발표.
 4. *Democracy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Kommersant」 (2012. 2. 6) 정부제도, 민주주의, 부패 문제 등 언급.
 5. *Building Justice-A Social Policy for Russia*, 「Komsomolskaya Pravda」 (2012. 2. 13) 사회정책 방향 발표.
 6. *Being Strong-National Security Guarantees for Russia*, 「Rossiiskaya Gazeta」 (2012. 2. 20) 국가안보, 국방정책 방향 발표.
 7. *Russia and the Changing World*, 「Moscow News」 (2012. 2. 27) 외교정책 방향 발표.

■ 이를 인식한 푸틴은 경제 다각화 및 현대화를 위해 투자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투자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음.

- 푸틴은 향후 20년간 일자리 2,500만 개를 창출하고, 5년간 노동생산성을 30% 증대할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의 투자규모를 2015년까지 GDP의 2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함.³⁾
- 2011년 러시아의 투자규모는 6% 성장하고 GDP의 22.7%를 차지했으나 이 수치는 러시아 경제의 현대화 및 다각화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임.
- 더욱이 러시아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2011년 자본유출이 84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2012년 1월에만 170억 달러가 유출되었음.⁴⁾

■ 푸틴은 2012년 2월 ‘러시아 2012 포럼’에서 향후 수년간 ‘Doing Business’ 세계투자환경 순위에서 20위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하였음.

- 러시아는 ‘Doing Business 2012’의 세계투자환경 순위에서 총 183개국 중 120위를 기록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푸틴은 향후 3년간 상위 30위, 그 이후 상위 20위를 기록하기 위해 △ 기업가 권리보호제도 형성 △ 투자재판소 설립 △ 사업가를 불법적으로 보는 구소련식 법규 폐지 △ 기업활동의 통제이념 변화 △ 투자전담기구의 권한 확대 △ 서방의 기업문화 수용 등 여섯 가지 방안⁵⁾을 제시하였음.
- 이 밖에 해외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비원자재 부문·사회 및 인프라 부문 투자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음.

나. R&D 및 혁신 부문 투자 확대

■ 푸틴은 R&D 및 혁신 부문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새로운 산업기술정책(New Industrial Policy)을 펼 것이라고 천명함.

- 내수시장 확대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물론 기술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스콜코보(Skolkovo)⁶⁾ 같은 혁신산업단지 조성, 혁신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 산업단지 등을 통해 의약, 첨단화학, 비금속, 우주항공기 제조, IT·NT 등의 기술혁신산업에 정부의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임.
- 혁신제품의 비중을 현재 4~5%에서 향후 10년간 25~30%로 높일 것이며, 2020년까지 R&D 투자를 GDP

3) *Moscow Times*(2012. 1. 13).

4) *Oxford Analytica*(2012. 2. 20).

5) *Izvestia*(2012. 2. 20).

6) 메드베데프 정부는 현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4I(Innovation, Investment, Infrastructure, Institutions)”를 제창하였음. 스콜코보(Skolkovo) 산업단지는 모스크바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첨단산업단지로 2012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러시아 정부는 향후 3년간 5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

의 2.5~3%(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함.

- 첨단기술 및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푸틴은 공기업을 통해 2012년 313억 달러, 2013년 494억 달러를 혁신 부문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함.

■ 러시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화 정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 먼저 푸틴은 대학 및 과학연구소를 혁신동력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연구소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경제혁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구 및 공학 부문 일자리에 대한 러시아 내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관련 분야 교육시스템의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혁신 부문 사업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함.

다.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민영화 추진

■ 푸틴은 또한 투명성 강화 및 구조적 부패 척결을 위해 2016년까지 정부 부문을 축소할 것을 공약하였음. 특히 이번 민영화 정책은 경제구조 변화 도모, 즉 경제 경쟁력 향상과 민간 부문 활성화를 목적으로 둔다고 발표하였음.

- 푸틴은 원자재 관련 기업의 경우 정부소유 주식을 줄일 것이며, 향후 가스프롬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표명하였고, 비원자재 관련 기업의 경우 모든 주식을 매각할 것이라고 하였음.
- 그러나 국영방송 채널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국영방송 채널을 통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함.

■ 사실 푸틴의 민영화 공약은 현 메드베데프 정부의 정책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음. 러시아는 2009년부터 제3차 민영화 정책⁷⁾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으며, 2017년까지 더욱 확대되는 민영화 프로그램을 2011년 말에 발표하였음.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2012년 5개 대기업의 주식이 매각될 예정이며 민영화 방식은 공개매각(IPO)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7) 제1차 민영화 정책(1992~94년)은 고르바초프 통치하에 고안되었음. 러시아 재산관리위원회는 1991년 기준 가격으로 1만 루블의 바우처를 모든 국민에게 분배했음. 이 바우처는 국가에 의해 지정된 민영화 대상주식을 매입 및 매각할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당시 국가 지분의 29%가 매각되는 데 쓰인 지정된 지불수단이었음. 바우처 프로그램은 70%의 대기업 및 중기업, 그리고 90%의 소기업들이 민간 부문에 귀속되는 데 기여했음.

제2차 민영화 정책(1994~97년)은 옐친의 정책으로 주식을 직접 현금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당시 정부의 재정수입 확대가 주요 목표였는데, 시행결과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이 값싸게 사회특권계층에 귀속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음. 이 때문에 당시의 민영화를 러시아어로 'privatizatsiya'가 아닌 약탈적 성격을 반영한 'prikhvatizatsiya(grabification)'라고 일컫기도 함.

- 2012년 매각 대상기업은 Rosneft(10~15%), VTB 그룹(10%), Sovcomflot(25%), FGC UES(4.11%), RusHydro(미정)임.
- 2017년까지 주식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약 6조 루블(2,1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석유 및 가스, 항공, 금융, 농업 부문 등 20개 국유기업이 민영화 대상임.
- 러시아 정부는 민영화를 통한 정부수입이 2012년 3,000억 루블(100억 달러 이상)에 달하고, 2013년에는 3,800억 루블, 2014년에는 4,750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예상수치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2011년 12월 달러 환율 기준).

표 3. 러시아 민영화 계획(2012~17년)

기업명	관련 산업	정부 주식보유량 (%)	시행 시기
Rusnano	나노기술	100% → 90%	2012~13년
FGC UES	전기	79.11% → 75%+1	2012~13년
RZD	철도	100% → 75%+1	2013년부터
UralVagonZavod	자동차	100% → 75%+1	2017년까지
Transneft	석유·가스	78.1% → 75%+1	2017년까지
Sovcomflot	항공	100% → 50%+1	2012~13년 (2014~15년 민영화 확대 가능)
Sberbank	금융	57.58% → 50%+1	2012~13년
United Aircraft Corporation	항공	82.95% → 50%+1	2017년까지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	조선	100% → 50%+1	2017년까지
RusAgroLeasing	농산물	99.99% → 0%	2017년까지
Aeroflot	항공	51.17% → 0%	2017년까지
Rosselkhozbank	금융	100% → 0%	2017년까지
Rosneft	석유·가스	75.1% → 0%	2017년까지
VTB	금융	75.5% → 0%	2017년까지
Alrosa(다이아)	원자재	50.93% → 0%	2017년까지
Sheremetyevo Airport	항공	100% → 0%	2017년까지
Inter RAO	에너지 소매	14.8% → 0%	2017년까지
Zarubezhneft	석유·가스	100% → 0%	2017년까지
United Grain Company	농산물	100% → 0%	2012~13년
RusHydro	수력발전	57.97% → 0%	2017년까지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자료를 저자 재구성.

- 실제로 2010~11년에 12개 기업의 공개매각(IPO)을 통해 민영화 정책이 일부 시행된 바 있음.
- 2010년에는 Phosagro, Global Ports, Nomos Bank, Etalon Group, Rusagro, HMS가, 2011년에는 Trans Container, Mail.ru, O'key, Mostotrest, IRC가 일부 매각되었음.
- 러시아 정부는 국가전략산업 목록을 축소한 바 있으며, 관련 법안은 2011년 12월 21일 발효됨.

■ 그러나 러시아의 야심찬 민영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도층의 원만한 합의와 기업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실제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함.

- 현재 세친을 중심으로 한 실로비키들은 민영화 대상주식이 현재 글로벌 위기로 인해 평가절하된 상태임을 이유로 들며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으며,⁸⁾ 공산당은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점진적인 국유화를 주장한 바 있음.

라. 세제 개편

■ 푸틴은 재정을 확충하고 사회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수증대를 추진할 계획임.

- 2013년부터 호화주택, 고급자동차 등에 사치세(luxury tax)를 부과할 계획이며, 주류세 및 담배세 재인상 가능성도 있음.
 - 푸틴은 사치세가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는 ‘super-consumption’ 품목에만 부과될 예정이며 중산층에는 여파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사치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⁹⁾
 - 국민보건 및 인구정책 차원에서 ‘알코올 중독(alcoholism)’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자 2012년 1월부터 주류세를 20% 인상하였으며, 주류세 및 담배세 추가인상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¹⁰⁾
- 1990년대 탈소비에트 직후 단행된 무질서한 민영화로 혜택을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올리가르히세(Oligarch tax)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임.¹¹⁾
- 이 외에 지하경제 탈피 및 세금포탈 근절을 위해 전략기업의 해외 자회사(셸컴퍼니) 설립에 제재를 가할 방침임.

■ 산업다각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농업 부문 보호를 위한 세제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 하이테크,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각화 차원에서 비석유가스 부문은 증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창출형 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임.
- 현재 기술 혁신경제특구(SEZ) 입주업체들에 제공하고 있는 소득세 및 보험료 혜택을 테크노파크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재무부 및 경제개발부에 제안함.¹²⁾
- WTO 가입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 면제기한 연장 및 농업보조금 지급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임.¹³⁾

8) *Oxford Analytica*(2012. 2. 8).

9) *Moscow Times*(2012. 2. 22).

10) *Nezavisimaya gazeta*(2011. 10. 18); *Vedomosti*(2011. 3. 25).

11) *RBC Daily*(2012. 2. 10).

12) *Itar-Tass daily*(2012. 2. 17).

13) *Itar-Tass daily*(2012. 1. 31).

- 한편 러시아는 WTO 가입과 함께 무역왜곡적인 농업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농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¹⁴⁾

■ WTO 가입 및 공동경제구역(CES) 출범에 따른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를 확립하고, 중앙·지방 간 세금분배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

- WTO 가입(2012년 상반기) 및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 공동경제구역(CES) 출범(2012년 1월)에 따라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시스템 현대화를 추진할 방침임.¹⁵⁾
- 푸틴은 “세금서비스는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70% 수준인 세금신고 전자화 비율을 2015년까지 80%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함.
- 지방세원 확보를 위해 가스프롬, 트랜스네프트 등 주요 기업들의 ‘중앙집중식’ 세금결제 시스템을 개선하여 중앙·지방 간 세금분배를 효율화할 방침임.¹⁶⁾

마. 지역경제 개발

■ 푸틴은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농업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임.

- 연방예산의 일부를 활용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로, 상수도, 쓰레기 폐기 및 재활용 시설, 유치원, 스포츠센터 등 사회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임.
- 주요 경제 중심지 주변의 토지를 개발해 농경지를 확대하고, 농업 마케팅 시스템 및 식료품 도매센터, 농산물 저장시설 등을 설치하여 농업을 활성화할 방침임.
- 푸틴은 외곽지역 토지개발을 통해 1.5~2배에 이르는 농경지를 확보하여 토지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농업 수익성을 제고하고 거주비용 및 상업목적 부동산비용도 20~30%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대도시간 고속철도 구축 등 운송 현대화를 추진하고, 극동시베리아 지역 통합운송망 구축 등 인프라 프로젝트 실행을 촉진할 계획임.

- 항공·선박·고속철도 등 운송 현대화를 위해 2012년에 20억 루블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8년 월드컵을 대비해 고속철도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임.
- 658km에 이르는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고속철도 건설에 6,275억 루블을 투입할 계획이며, 프랑스·독일·중국·한국 컨소시엄이 유망한 입찰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음.¹⁷⁾
- 모스크바·예카테린부르크 구간 고속철도 프로젝트도 수립할 계획임.

14) 이재영 외(2011), 「러시아의 WTO 가입: 경제적 효과와 우리의 대응방안」, 『오늘의 세계경제』, 제11-3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 *Itar-Tass daily*(2011. 11. 21).

16) *Itar-Tass daily*(2011. 12. 20).

17) *Moscow Times*(2011. 11. 9).

-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운송 인프라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고, 극동지역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합자회사를 설립할 방침임.
- 「2020 극동·자바이칼 경제사회발전전략」, 「2030 철도운송 현대화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 바 있으나, 푸틴은 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영기업이나 주식회사 설립을 제안함.
- 이는 100% 정부자본을 바탕으로 국영기업이나 대규모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천연자원 이용, 통신·도로 및 항만 등 인프라 설비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을 골자로 함.¹⁸⁾
- 또한 푸틴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예비기금(Reserve Fund)을 조성할 것을 제안함.¹⁹⁾

■ 푸틴은 지역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촉진하여 지역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임.

- 푸틴은 경제개발부에 지역산업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목록을 제출하고, 교통·에너지·주택 인프라 건설 수요 파악 및 관련 기업 유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²⁰⁾
- 이와 관련하여 현재 톱스크 지역에 기술혁신특구(SEZ)를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으며, 로스아톰이 울리야노프스크 및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에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²¹⁾
- 올림픽 이후 인프라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소치를 관광·레크리에이션 특구(SEZ)로 승인할 가능성이 있음.²²⁾
- 북코카서스에 이미 5개의 관광·레크리에이션 특구(SEZ)가 구성되어 있어 북코카서스 관광클러스터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2012년 5월 7일 출범할 푸틴 3기의 정책방향은 큰 틀에서 보면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러시아 국내 정치 및 경제 정책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소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메드베데프 정부와 운명공동체인 푸틴의 대통령 당선은 엄밀히 말하면 정부교체도 정권교체도 아닌 자리 재배치에 불과하며, 지난 4년 동안 메드베데프 정부하에서 푸틴은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우선 국내 정치적으로는 시민들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혁, 인적 쇄신 및 보다 공정한 제도(법치) 도입 등을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18) *Itar-Tass daily*(2012. 2. 7).

19) *FK-Novosti*(2012. 2. 8).

20) *Itar-Tass daily*(2012. 1. 30).

21) *Itar-Tass daily*(2012. 1. 30).

22) *Travel.ria.ru*(2012. 2. 8).

- 경제정책 면에서는 이 글의 2장에서 상술한 푸틴의 경제 프로그램이 핵심적인 내용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유주의자(liberal)와 국가주의자(statist) 간 요구의 균형을 맞추려는 푸틴의 의도로 판단됨. 그러나 현재 엘리트 그룹 간 논쟁이 강화되고 있는바 대선 이후 내각(인사) 결정이 주요 변수임.

■ 푸틴 3기에는 경제 현대화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WTO의 회원국으로서 관련 규범을 준수하며, 지금보다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가 2012년 상반기 내에 WTO 정식 회원국이 되면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 및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푸틴은 자국 내 외국인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자국기업의 해외진출과 세계시장에서의 비중 확대를 목표로 삼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인바,²³⁾ 이는 러시아의 투자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

■ 푸틴 집권 3기를 맞이하여 이제 우리는 한·러 협력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질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복합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 즉 지금까지 대러 협력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러시아가 정·경(政·經)이 결합된 복합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보다 정교한 협력전략을 수립·추진해나가야 함.
- 특히 전략적 상품인 에너지자원 확보, 남·북·러 가스관 건설 및 전력망 연계, 대륙철도 연결 등 물류교통 연계 사업은 정치·경제적 복합전략하에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고, 보다 과감한 대러 접근방안이 필요함.

■ 러시아는 2012년 9월에 개최될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2018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푸틴은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발전에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 상황임.
- 뿐만 아니라 한국은 향후 남·북·러 가스관 건설, 철도연결사업, 전력망 연결사업 등 메가 프로젝트를 러시아와 공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남북러 가스관, 전력망 연계, TKR~TSR 연결사업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정부 차원에서 ‘메가 프로젝트 협력위원회’ (가칭)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새로운 성장공간이 필요한 한국이 새로운 ‘북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것임.

23) Moscow News(2012. 2. 27).

■ 또한 앞서 언급한 푸틴의 새로운 산업정책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정부는 의약, 첨단화학, 비금속, 우주항공기 제조, IT·NT 산업 발전을 위해 이 분야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함. 따라서 한국은 이 부문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석하여 러시아와 협력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업들은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추진할 민영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러시아의 민영화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현재까지 발표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민영화 공개매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러시아 기업 지분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KIEP